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5 | 2023.10.16 (2023.10.10~10.1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2. 상임위원회 일정
3. 지난 주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0.10~10.15)

10/10부터 시작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있었던 바, 주요 내용들은 아래 「**지난 주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모기금(펀드)을 국내 최초로 제도화하여 10월 19일부터 시행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은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국 등 세계적(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새로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지난 주 발의된 주요 입법안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주식처분명령권을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기준 이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1인)**」 등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0/16(월) [법사위]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등 [정무위] 공정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국감 실시 등 2주차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19(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문화방송(MBC)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6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1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6인) 1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11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1인) 1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15
2. 상임위원회 일정 18
3. 지난 주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19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32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0~10.15) [바로가기](#) 34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3차 개정 발표 (기업지배구조)
-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발표 (방송통신(TMT))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규정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0)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 시행(10.19)	2023-10-10
---------	--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됨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미국 등 세계적(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음
-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투자 및 운용 자율성 확대 주요 내용 >

구 분	자율성 확대 내용
투자 자율	① 출자의무(총 운용 자기금(펀드)에 60% 이상 출자)를 준수할 경우, 상장주식 보유 제한 없음 (최대 40%까지 보유 가능)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 허용
모기금(펀드) 운용 편의	① 모기금(펀드) 운용사가 자기금(펀드) 운용사로 활동 가능 ※ 위험 분산을 위해 모기금(펀드)가 최대 30%까지 출자 가능 (자기금(펀드) 지분 10% 미만) ② 자기금(펀드)에 출자한 모기금(펀드)를 출자자 1인으로 산정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3

-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등 주요 동향을 반영, '24년 제출보고서부터 적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임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우리나라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음

* '22년말 점검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를 평균이 전년 63.5%에서 66.7%로 상당폭 개선 →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일정] ('19) 자산 2조원 이상 → ('22) 1조원 이상 → ('24) 5천억원 이상 → ('26) 코스피 전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됨. 특히 20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새로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음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2023년 개정)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022년 개정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하였으며,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하였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세부원칙 관련

구분	주요 개정내용	원칙 번호
①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여부 -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	1-4
②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 위한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 -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을 공시	1-2 1-4 2-1
③ 메자닌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 조달과정에서의 주주의견 수렴정책 공시 의무화	2-3

④ 이사회 다양성	•성별 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확대 •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 기술	4-2
⑤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 책임보험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남용방지 정책 공시	7-1
⑥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사익편취/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 •1차적인 당국의 판단 (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	4-4

② 핵심지표 관련

신설 항목	삭제 항목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도록 일부 핵심 지표를 정비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5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

이에 따라,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9 시행
---------	-----------------------------------	---------------

종전에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이자율을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체납기간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정하는 한편,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등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임차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2조제1항 신설, 제41조제7항)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13. ~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42조제2항)

-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7, 팩스: 044-201-5601\)](tel:044-201-4157)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13 ~11.22
-------	-----------------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 간소화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 국내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자회사로 소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②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규제 합리적 개선 (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2항)

-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2~4개의 소수 보험사 위주로 영위되어 시장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판매비중 25% 규제를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판매비중규제를 완화(25% → 50%)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5, 팩스: 02-2100-2933\)](tel:02-2100-2965)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2023-10-11 발의
-------	--	---------------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최대주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의결권의 제한은 사실상 최대주주와 명의만 다른 2대 주주의 지분 증가 등으로 이어져 처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주식처분명령권을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제5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3-10-10 발의
---------	------------------------------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1,3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고 2014년 세법개정 이래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그 비중은 2014년 이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 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023-10-13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6인)

2023-10-10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적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특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2023-10-10 발의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1인)

2023-10-10 발의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41조제2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1인)

2023-10-10 발의

2021년 4월 20일,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특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반면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함으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하였다며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를 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기준 이상으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제2항)
- ② 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81조제4호)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파일 다운로드\]](#)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10/16(월) 11개 위원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군사법원	국방부 / 14:00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	국회 / 10:00
	기재위	<지방1반> 대구지방국세청 등 6개 기관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 10:00
		[현장시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경북 경산 / 14:00
		<지방2반> 광주지방국세청 등 11개 기관	광주지방국세청 10:00 / 한국은행 전북본부 14:00
	과방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	국회 / 10:00
	외통위	<아주반> 주일본대사관	주일본대사관 / 09:30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회 / 10:00
	행안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 10:00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 시청감사종료후
	농해수위	산림청 등 6개 기관	국립수목원 / 10:00
		[현장시찰]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 16:30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제주도
	환노위	기상청 등 17개 기관	국회 / 10:00
		[현장시찰]	김포국제공항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국회 / 10:00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10/17(화) 12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기관	서울고검 / 10:00
	정무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10:00
	기재위	<지방1반> 부산지방국세청 등 8개 기관	부산지방국세청 / 10:00
		<지방2반> [현장시찰]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충남 부여 / 10:00
	교육위	<지방1반> 전북대학교 등 6개 기관	전북대 / 10:00
		전라북도교육청 등 4개 기관	전북대 / 14:00
		<지방2반> 경북대학교 등 7개 기관	경북대 / 10:00
		경상북도교육청 등 3개 기관	경북대 / 14:00
	과방위	한국방송공사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외통위	<미주반> 주파나마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 10:00
		<아중동반> 주쿠웨이트대사관 등 2개 기관	주쿠웨이트대사관 / 14:00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등 3개 기관	주베트남대사관 / 10:00
	국방위	[현장시찰]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AI / 10:00
		국방기술품질원 등 2개 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14:00
	행안위 행안위	경기도	경기도청 / 10:00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	경기남부경찰청 / 도청감사종료후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	국회 / 10:00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제주도
	환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2개 기관	국회 / 10:00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	국회 / 10:00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10/18(수) 4개 위원회	교육위	<지방1반> 충북대학교 등 4개 기관	충북교육청 / 10:00
		충청북도교육청 등 4개 기관	충북교육청 / 14:00
		<지방2반> 경상국립대학교 등 5개 기관	부산교육청 /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3개 기관	부산교육청 / 14:00
	외통위	<구주반>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3개 기관	주이탈리아대사관 / 10:00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	국회 / 10:00
	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10/19(목) 12개 위원회	법사위	법제처	국회 /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 14:00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 10:00
	기재위	기획재정부 (경제 · 재정정책)	정부세종청사 / 10:00
	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 등 2개 기관	국회 / 오후
	외통위	<미주반>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주코스타리카대사관 / 10:00
	국방위	[현장시찰] 해군7전단, 해병대9연단	제주 / 10:00
	행안위 행안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 10:00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 시청감사종료후
	문체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4개 기관	국회 / 10:00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회 / 10:00
	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	국회 / 10:00
	환노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0개 기관	국회 / 10:00
	국토위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국회 / 10:00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시간
10/20(금) 10개 위원회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등 20개 기관	국회 / 10:00
		대전고등검찰청 등 13개 기관	국회 / 14:00
	기재위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 10:00
	교육위	경기도교육청 등 4개 기관	국회 / 10:00
	외통위	<구주반> 주독일대사관 등 3개 기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10:00
	국방위	[현장시찰] 특전사훈련장, 마라도	제주 / 10:00
	문체위	[현장시찰 1반] 파주 등	파주 / 10:00
		[현장시찰 2반] 평창 등	평창 / 10:00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등 11개 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0:00
		[현장시찰]	부산 / 16:30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국회 / 10:00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등 2개 기관	국회 / 10:00
	환노위	[현장시찰] 경북 예천 (수해지역)	미정
10/21(토) 1개 위원회	외통위	<아중동반>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주남아공대사관 / 17:00
10/22(일) 1개 위원회	외통위	<미주반> [업무보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10:00

2. 상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10/19(목) 10:00	- 업무현황보고(문화방송) ※ 장소 : 상암 MBC

3. 지난 주 상임위별 주요 국정감사 상황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공백 책임	법무부 등 5개 기관	2023-10-10
---------	---------------------------	----------------	------------

(국힘)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

- 이재명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낙마. 이재명대표 구속영장재판 증거인멸 세부내용 열거하며 ‘공동정범’ 주장. 이균용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은 단순 과실. 민주당이 대법원장 궐위 장기화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

(민주)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임자를 인선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

-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는 법무부와 대통령 책임. 검찰이 야당대표 구속작전에 실패한 것. 이균용 판사 특별 감사해서 법원 명예 회복해야 하며 인사검증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주장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여론조작 관련	법무부 등 5개 기관	2023-10-11
---------	--------------	----------------	------------

(국힘) 대선개입 여론조작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 촉구

- 전주혜(국),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를 꺼냈고, 김만배의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 0.73%p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된 것은 가짜뉴스가 혁혁한 공. 명명백백 수사해주기 바람

☞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이 현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중’ 답변

(민주)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당일 국회 압수수색 실시에 유감 표명

정무위원회	가계 대출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1
-------	----------	-------	------------

- 김한규(민), (정부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대출 장려 정책은 그대로 유지 중. 금융통화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 원인이라 지목, 8월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일부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잘못으로 몰아감

- 양정숙(무),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출시 2개월 만에 그만하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음. 우왕좌왕 갈지자 정책 아닌가?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리 차이가 나면 무조건 외환이 유출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움. 채권시장에서 유출, 자본시장에서 유출 등이 있는데 각각 요인이 다름. 외환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있을 때 당국 개입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무위원회

공매도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1

- 윤주경(국),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 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음.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높음
-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관들은 거래 방식 자체가 대차 거래 방식. 거기다 헤어컷을 해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까지 넘어감.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정무위원회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1

- 윤창현(국), 2만7000여명 정도의 개인 투자자가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 적지 않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됨.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위에서 업계와 함께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펀드 설계 필요함
-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해외부동산 펀드가 대부분 사모펀드이고 기관투자자가 중심이지만, 일부 공모펀드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잘 인식하고 있음. 업계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음

정무위원회

금리 차이에 따른 외환 유출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1

- 박성준(민),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으로 외환 유출 우려가 나옴
-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리 차이가 나면 무조건 외환이 유출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움. 채권시장에서 유출, 자본시장에서 유출 등이 있는데 각각 요인이 다름. 외환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있을 때 당국 개입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이전 관련

금융위원회

2023-10-11

- 김희곤(국),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 끝남. 세부 계획안은 산은 내부적으로 마련 중. 최종적으로 이전 계획을 승인받는 것은 산은법 개정 필요함. 국회에서 법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탄력받아 움직일 수 있을거라 생각함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추계 오차 관련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2023-10-10

- 양경숙(민), 이렇게 큰 세수오차는 세목별로 세입결산 및 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는 국세청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
- ☞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도 자체 세입전망을 세추위에 제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 다만 경기동향이나 거시경제는 기재부나 한은이 전문성이 있다. 미래 세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답변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안전위해물품 규제 강화 검토

관세청 등 3개 기관

2023-10-12

- 배준영(국),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도구였던 너클 등 대부분 중국산임.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해 수입 등 관리하고 있는가? 미국 38개 주와 호주, 캐나다는 너클을 불법무기로 지정하고 있음
- ☞ 고광효 관세청장, “너클은 현행 총포화약법상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라 수입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

교육위원회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부 등 8개 기관

2023-10-11

- 정경희(국), 강남 학원가가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에 참여했던 교사 명단을 언제든 파악해 거래를 타진할 수 있다고 함.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일부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그들끼리 돈을 버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보임
-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교육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함.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라고 답변

교육위원회

제4세대 나이스 관련

한국고전번역원 등 13개 기관

2023-10-13

- 권은희(국), 대기업의 참여 제한되어 있음. 행정편의적으로 유치원도 포함시켰음. 하자보수 시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음. 2020년교육부가 감사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강민정(민), 나이스에 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접근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가. 전담인력까지 포함한 대책방안 강구 바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 클릭
응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2023-10-10

- 박찬대(민), 다음 축구 응원 클릭에 대해 총리가 TF를 구성함. 여당 과방위 간사는 친민주당, 친북, 친북세력이 한 일이라고 주장함. 이런 것에 근거해 보도가 나가면 가짜뉴스 아닌지 질의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상황을 방지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허점과 제도적 미비를 사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 국내, 해외 세력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해외세력이라고 단정해 말할 적 없다”고 답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법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 2023-10-11

- 김병욱(국), 과기부와 산업부에 흩어진 우주항공업무를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개발도 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과 천문연 등이 발전을 거듭하려면 우주청에서도 중복을 피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선제적인 연구와 평가연구 등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이 우주항공청과 천문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며 이는 우리나라 우주분야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5G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 2023-10-11

- 김영식(국),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국민들은 값비싼 요금제에 가입했고 결국 이동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역대급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본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R&D 예산 삭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 2023-10-11

- 장제원(국), R&D 예산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기부가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R&D 예산은 추후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또한 과기부가 왜 이런 카르텔 사례를 감싸는지 모르겠으며 이런(자료에 익명으로 제출한) 기업·협회를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된다고 주장
- 고민정(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서울 이태원 참사 등에도 국민 안전 관련 R&D를 대폭 삭감했다라고 주장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혀 그렇지 않다. 공공 안전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변
- 이정문(민), 윤석열정부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낮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답변
- 허숙정(민), 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사례를 찾았는지 질의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R&D 카르텔이라는 언급은 없었고 나눠먹기 근절을 언급한 것, 연구비를 쉽게 받기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나, 주인이 정해져 있는 과제들이 실제로 있다. 라고 답변
- 민형배(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과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답게 하기 위한 것”라고 답변
- 조승래(민), 핵심 자료뿐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 협력 R&D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며 1조8000억원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내부 검토 자료기 때문에 제출한 전례가 없으며 의원들의 자료 요청 건수가 7000건이 넘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라고 답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후쿠시마 농산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기관 2023-10-11

- 최춘식(국), 이재명 대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는 발언 관련, 이를 액면대로만 본다면 우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이야기로 인정되는 것

- 주철현(민), 일반 소비자들은 수산물인지 수산가공품인지, 농산물인지 농산가공품인지 잘 모름. 정부에서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도 국민이 식별해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함
-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1개 품목은 수입 금지돼 있음. 가공식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하지만 그것은 국경에서 전부 방사능 검사를 샘플링해서 하고 있음”이라고 답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안정제(양곡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기관

2023-10-11

- 이원택(민), 쌀 등 16개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 관련 시뮬레이션상 1조100억원 정도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 소비자에게는 시장 가격 소비라는 이점 있음
- 이양수(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됨. 지금 쌀값이 20만원 선을 돌파한 것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 전략작물의 직불 확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 선제적인 수급 관리와 수확기 대책으로 쌀값 안정을 기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함
-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적정한 가격에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100% 찬성함. 그러나 (가격 안정 제도는) 과잉 문제가 생길 것. 한 품목 가격이 다른 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상당히 지출하게 되고,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관련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

2023-10-12

- 윤재갑(민),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돼 있는데 수산가공품은 530t, 통조림과 건조 제품, 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식탁에 올라가고 있음
- 정희용(국), 과학적인 피해 검증 없이 우리가 (수산물 수입을) 막으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끌고 갈 것.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그냥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님
- 최춘식(국), 원전 처리수는 (한국보다)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으로 먼저 감.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해역보다 캐나다, 미국이 더 높는데 (해당 국가들은) 그렇게 해약을 끼칠 만큼 지나친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체 수입을 막는 것은 과도함. 우리나라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고, 약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함. WTO 협정 같은 곳에서 근거 없는 일률적인 (규제) 부분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답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YTN 지분 매각 관련

농협중앙회 등 8개 기관

2023-10-13

- 위성곤(민), 마사회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공공언론을 지켜내는 역할을 해야함. YTN 지분 매각 관련 마사회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 소병훈(민), YTN 지분 매각이 마사회 경영이 어려워져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마사회 자체 판단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음. 마사회 자체 판단이라고 잘못 말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음.

☞ 정기환 마사회장, 자체판단이었음고 답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NH투자증권 日 발전소 투자손실 관련

농협중앙회 등 8개 기관

2023-10-13

- 김승남(국), NH투자증권이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에 실패하면서 SPC 출자금과 대출금 등 약 838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됨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현재 최소 500억 원 회수를 확정했고 일본 현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투자금 전액은 물론 플러스 알파로 회수가 가능할 것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적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0

- 양이원영(민),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 저런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R&D 예산 삭감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 2023-10-12

- 최형두(국), 지난 몇 년 새 우리나라는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음. 나라 공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 들게 하는 것임
- 홍정민(민), 중기부가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발 벗고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은 경제 상황임.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음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생각함.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음” 답변
- 김경만(민),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계속과제 지원에 차질생김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성공률은 99%인데, 상용화율은 낮은 등 문제가 있어 전반적 개편이 필요. 다만,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김성원(국),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국민 혈세가 눈먼돈으로 전략해서는 안 됨.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가 나서서 R&D 예산에 대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함.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다만, 피해가 기업들에게 있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만들겠음” 답변
- 정일영(민), 소부장 특별회계 85% 삭감 등 R&D 축소 대책 요구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부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임. 중소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김성환(민), R&D예산 삭감과 ‘천공’강의 관계 지적. R&D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원전 관련 R&D만 증가 지적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R&D개편은 10년도 넘는 과제이며, 원전기업이 지난 몇 년간 고사할 정도로 힘든 상황임” 답변
- 양이원영(민), 지역특화산업육성 R&D 3년 연속 우수였지만 61.8% 삭감됐음. 상용화기술개발도 64.5% 삭감 등 R&D예산 축소 대책 필요성 지적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혁 필요성 이해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피해는 없도록 하겠음” 답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현황 관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

2023-10-13

- 정청래(민), 문재인 정부에서 코트라가 투자유치사절단을 통해 2021년 290건, 투자액 77억달러의 성과를 이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갑자기 121건, 올해는 21건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
 - ☞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투자유치는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금액적으로는 최대치”

- 정청래(민),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중국 수출이 막혀있고 무역 수지 적자임. 또한 2022년 5월부터 수출이 빨간 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부터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적
 - ☞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중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전개가 안 되는 것은 락다운(코로나19 봉쇄)이 풀린 다음에 기대를 했지만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 프리미엄 소비재 등 시장 수요에 맞도록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
- 이재정(민),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당부
 - ☞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해외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들고 또 법률 자문 서비스도 좀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 IP(지식재산권) 데스크를 통해서 위조품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다”라고 답변
- 김정한(민), 세계 무역에서 싹튼 상품으로 팔리는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540조원 정도인데 국내에 이와 관련한 피해 규모가 연간 약 22조 원 정도에 달하고 일자리 감소 약 3만 1000개, 약 4100억원 세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 대응 촉구
 - ☞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사기조직들의 지능화, 다양화로 스피어피싱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

보건복지위원회

문재인 케어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3-10-12

- 강선우(민), 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 문제점, 초음파, MRI 급여실태 1600억 혈세낭비 의심사례 발표, 심평원에 의하면, 개별건 구체확인이 필요하며, 전체가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려움, 낭비된 재원은 필수의료에 투입한다고 하나, 재정절감 목표도 설정하지도 않음, 초음파, MRI 심사 조정건수도 미비하여,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로 도덕적 해이는 아님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장성 지속강화하고, 필수의료지원 지속 추진하겠음"이라고 답변
- 이종성(국), MRI촬영 증가로 급여지 지출 급증, 심평원 급여기준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기준이지 의료적 판단은 아니라는 문제제기
- 강기윤(국), 유전자수 무전단명, 중증암질환자 신약 급여 필요, 예를 들어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1억5천만원) 등 급여 필요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속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
- 강은미(정), 신의료기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악화정책등을 사전 억제, 2차 건보 종합계획에 반영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 관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3-10-12

- 백종헌(국), 비대면 진료 성장 필요, 의료사고시 법적책임소재 정비, 오남용 사례, 전문의약품 고가약 처방 등 부작용 대책 필요성 제기
- 강기윤(국), 디지털 헬스사업은 제2의 반도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임상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개선 필요성 제기
- 서영석(민), 네이버 페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진료내역 등 노출, 네이버 포함 17곳에 문제 발생
- 남인순(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법사례 (약사법,의료법 위반), 건보재정 수가 낭비 등 발생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시범사업 추진 수가 조정 등 개선하겠음" 답변
- 신영현(민), 비대면 진료 의료쇼핑 등 개선 필요, 부작용 등 개선하여 디지털헬스 케어의 발전 등도 견인해야 함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하겠음" 답변

환경노동위원회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관련

환경부

2023-10-11

- 윤건영(민), 돈을 아끼기 위해 자회사에 넘기고 운전조작을 해 방지시설을 면제받았다는게 검찰 공소장 내용인데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환경부 재량 감면에서 최대치인 40%를 해줬음.
- 전용기(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아직 절차진행 중인데 규제개혁이 되면 불법이 아닌게 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감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님. 규제개혁과 현대오일뱅크 과징금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재판결과를 봐야할 것 같음”이라고 답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질의서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

2023-10-12

- 진성준(민),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가 끝나서 설문지부터 제출해달라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음. 숨길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음

- 김형동(국), 정부가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과정 아니겠나. 그중의 하나라도 오픈이 돼서 갑론을박이 됐을 때는 정부의 의견안이 아니고 애초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의견안이 될 수 있으니 정부안을 내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식 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지만 다시 이런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서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 드리겠음. 숨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전부 완성된 형태로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릴 것임”이라고 답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2023-10-12

- 우원식(민), 중처법과 관련해 올 8월 말까지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 검찰 송치가 됐고 내년 50인 미만 산업현장에서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 중처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보여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 제도 법률 내에서 최선을 다함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경제적 제재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요건, 범위를 대폭 줄였음”이라고 답변

- 우원식(민),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임. 이정식 장관이 더는 후배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지 말고 사퇴하는 게 그나마 막혀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끄는 길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음”이라고 답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관련

고용노동부

2023-10-12

- 윤건영(민), 윤석열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까다롭게 하는 것이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나와 있지 않음.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은 일반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에 갖는 허들 벽이 너무 높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정책 기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음”이라고 답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2023-10-10

- 최인호(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조작·왜곡 의혹 투성인 용역사 BC분석을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 행태 관련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받아야 함
- 김정재(국), 수많은 민생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양평고속도로만 정쟁으로 이끌고 있음. BC분석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조작하는 것도 문제
 - ☞ 원희룡 국토부장관,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
- 이소영(민), 양서면(예타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타던 6000대의 차량이 약 4분 거리(강상면)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배후인구 25만명의 3기 신도시의 고속도로 유발 수요가 고작 1000대인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옮기면 6배인 6000대가 늘어남
- 유경준(국), 예타 담당을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리м. 교통량 추정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고, 주민이 가는 경우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가 답변하는 게 옳음
 - ☞ 원희룡 국토부장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답변

국토교통위원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2023-10-10

- 김학용(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임. 억울하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맞으며,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데도 믿지 못하는 형국임
- 유경준(국),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 원을 더 내게 됐음
 - ☞ 원희룡 국토부장관,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변

국토교통위원회

재무구조 개선 및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2023-10-12

- 김학용(국), 도로공사 부채가 1년에 2조원 이상 늘고 있고 하루 이자만 25억원씩인데, 지난 3년간 자구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겨우 6천295억원. 강도 높은 재무 개선책 필요함
-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휴부지 중 불필요한 것은 자구책을 위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음. 선투자 금액도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도 못 받고 있음. 시설물 노후화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16(월) 10:00	힘센 충남! 문화관광도시 충남에 창의를 더할 문화 예술 교육 포럼	홍문표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의원회관 2소회의실
	10/16(월) 13:00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책토론회	강기윤·고영인· 인재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0/18(수) 10:00	디지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디지털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규제·갈등 문제 해소와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18(수) 14:00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김예지·장혜영· 진선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10/18(수)	「금주의 서평」 제649호 발간 - 도서명 : 경성 백화점 상품 박물지 - 저 자 : 최지혜	국회도서관	
	10/18(수)	「World & Law」 2023-19호 발간 - 치명적인 기술유출, 어떻게 방지할까?		
	10/16(월)	「NABO FOCUS」 발간 -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17(화) 09:30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16(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0호 발간 - 주거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국회미래연구원	
	10/16(월)	「Futures Brief」 제23-16호 발간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0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11(수)	「금주의 서평」 제648호 발간 - 도서명 :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 저 자 : 박정훈	국회도서관	
	10/12(목)	「현안, 외국에선?」 제68호 발간 -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10/12(목)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12(목)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10/10(화)	「이슈와논점」 제2148호 발간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0/11(수)	「NARS 현장실태조사」 제6호 발간 -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10/11(수)	「이슈와논점」 제2149호 발간 - BRICS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0/11(수)	일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10/12(목)	「이슈와논점」 제2150호 발간 - 미국 하원의장 해임은 어떻게 가능했나?		
	10/13(금)	「특별보고서」 -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10/13(금) 14:00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개최		조사처 대회의실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0~10.1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12(수)	기업지배구조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3차 개정 발표
10/13(목)	방송통신(TMT)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발표
10/13(목)	건설/부동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이를 반복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